

조응천 “보수야당도 참패 후 ‘친박’이 당장악해 죽었다”

친박에 친문 빚대 맹폭 “기득권·무오류 태도 여전”
“언론타, 靑 책임 얘기말라” 野 강성충도 한 얘기
“대선 승패 갈림길... ‘사는 길, 죽는 길’ 뻔히 보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문을 과거 보수야당을 장악했던 친박계에 빚대며 거듭 이선후보를 주장했다.
재선 소장파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선 이전 절간 같은 당내 분위기에 비해 괄목하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기득권과 무오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운을 뗐다.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서는 검찰개혁, 탈원전, 부동산 정책과 이른바 ‘조국 수호’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당의 핵심세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떠한 180석을 주신 민의를 받들어 돌파해야 하고, 인물에 대한 시종의 평가가 어떠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하였던 것 아

니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계열의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과거 새누리당 친박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18대 대선 승리 이후 급격히 보수화한 새누리당은 ‘유승민 파동’, ‘국경교과서 파동’, ‘친박 공천파동’ 등이 겹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우리 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며 “그랬으면 핵심세

력인 친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책임을 지기커녕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을 내세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이정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피할 수 있었을 것”, “전력도 약하고, 전략도 없는데 무모하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밀어붙이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는 당시 평가를 소개한 뒤 “이런 평가가 눈길을 끈다”고 했다.
이후 2017년 홍준표 대선후보 패배, 2018년 홍준표 지도부의 지방선거 참패, 황교안 지도부의 지난해 총

선 참패를 열거한 뒤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며 “혁신하고 변화하면 살았다.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면 앉아서 죽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언론이 문제다’ 분열하면 죽는다’ ‘똥똥똥쳐야 산다’ ‘왜 청와대 책임을 이야기하나, 2006년과 2016년 당시 여당 핵심부와 강성 지지층이 하던 이야기들’이라면서 친문 강경파를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떤가. 2022년 대선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길이다. 한 쪽 길은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죽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아무 관심없이 하시는 지도부 선출방식 같은 것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라”며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 당 대표 경선이야말로 ‘선명성 경쟁’의 장이 아닌 ‘혁신과 반성’의 장이 되는 데에만 집중하는 우리 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2014년 이른바 ‘정윤호 문건’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시절 영입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 송구합니다”

서동용 의원 광양시민과 국민께 드리는 입장 밝혀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과 각종 논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당 소속이었던 정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 광양시민과 국민께 송구함을 표했다.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에 불응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 정시장에 대하여는 지난 2일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 ‘제

명’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당 소속 지지층의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분노, 허탈감을 안긴 점을 거듭 송구함을 표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뭉쳐 이겨내야 할 지역사회 지도층이 논란의 중심이어서, 더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할

다. 앞으로 공직자 비위 관련하여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께서 납득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민과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엄중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당 지역위원회로부터 쇄신하고 바꾸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듬고 챙기며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로 입장을 마무리 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조광제 기자



백범 김구 묘역 참배하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앞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롯한 유족 등이 김구선생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회재,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를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히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몰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 영남권은 979만명에서 1,291만

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與 비대위 “최고위원,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서 뽑기로”

비공개 비대위서 만장일치 수정 의결... 다음달 2일 전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1일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내달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

회의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수정의결했다”며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의결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차기 당무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원 찬성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 | |
|-------------------------------|-------------------------------|
| 기사제보 (062) 222-2580 |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